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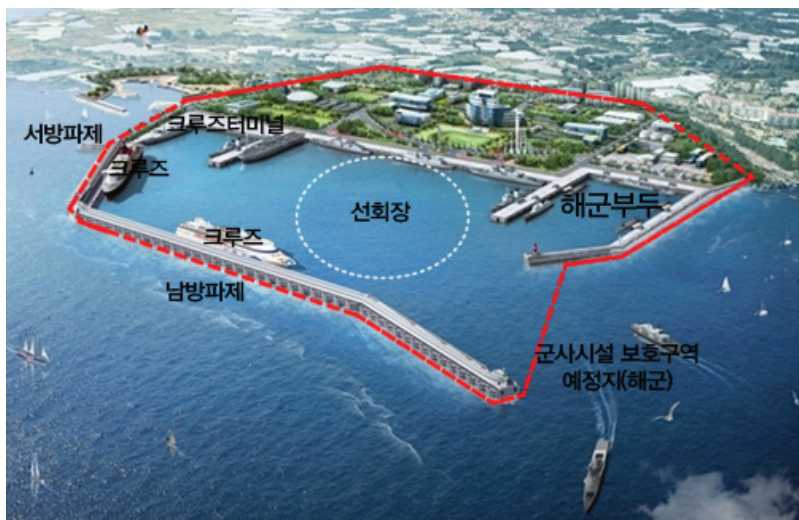
무늬만 무역항, 실제는 해군 전용 군사기지

허울뿐인 '무역항' 내세운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민항은 꺾데기, 군항 위주의 항만 설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도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해군의 꼼수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설계 당시부터 민항은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 청문 주재 관도 ‘15만톤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로 설계되지 않았다’ (2012. 4. 18)고 밝혔습니다. 15만톤 크루즈 선이 드나들기 위해서는 선회장을 넓히고 항로도 완만하게 바꾸어야 하지만 강정 앞바다는 지형이 좁고 주변에 연산호나 범섬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공사를 중단한 후 입지타당성을 포함하여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크루즈 운항 수역마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어 해군이 사실상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민항도 군이 통제, 크루즈 선박 출입도 군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국토해양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무역항’으로 입법예고했습니다. 무역항이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크루즈 항만구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하고 항만관제권도 도지사가 행사하는 등 민항에 대해 군부대가 간섭, 통제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는 무역항 지정과 관계없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크루즈선 입출항 허가권도 도지사가 아닌 관할 부대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군복합형’이니, ‘무역항’이니 하는 것은 허울뿐이고 강정에 지어지는 항구는 사실상 해군 전용기지일 뿐입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민항은 꺾데기일뿐, 실제로는 철저히 군항 위주로 건설되고 있다”

(강우일 주교, 방승인 권혜호·김미화 등 78인, 우근민 지사에 공사중지 명령 호소(2012. 5. 7))



우근민 지사는 당장 공사 중지 명령 내려야합니다!

제주도 청문 주재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 관리법)을 적용해 공사 정지가 가능하다(2012. 4. 18)' 는 종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구럼비 바위가 다 파괴되도록 시간을 끌면서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던 우근민 지사는 이제 와서 선회장 규모나 무역항 지정, 관제권 문제 등에 대해 제주도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말을 모두 뒤집고 있습니다.



구럼비

지금이라도 우근민 지사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면 강정의 평화와 구럼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강정 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도정의 말 바꾸기

우근민 제주지사, 해군기지 '사실상 찬성' (문화일보 2012. 5. 13)

“선회장 직경은 배 길이의 2배 정도(지름 690m) 돼야”

→ “요즘 나오는 배들은 얇은 자리에서 뱅뱅 돌면서 회전할 수 있는 배들이다.” (선회장 직경이 크지 않아도 된다는 뜻)

“무역항과 군항의 경계선이 필요하다”

→ “(무역항과 군항) 중복 지정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해도 무방하다는 뜻)

“관제권은 제주도지사가 행사해야”

→ “(관제권에) 예민하다 보면 제주도만 모나게 보이면서 도지사가 협의를 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다.” (관제권을 해군이 행사해도 된다는 뜻)

“도지사로서 주어진 권한(공사중지 명령)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사업의 신뢰 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면 회복불능의 국면에 처하게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될 공산이 크다”

(2012. 5. 4 제주의 소리, 김우남, 강창일, 김재윤 의원)